

# 2014년 6월 28일 시행 (서울시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A책형)

KG Passone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4. 7. 2(수) 14:00~15:00

총 평
-----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KG 패스원 한교고시학원 / 9급 행정학개론 전임 / 행정학 박사 김만식 입니다.

2014년 6월 28일 서울시 시행 9급 서울시 지방직 ‘행정학개론’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시험은 2013년 서울시 시험보다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2014년 4월 국가직 9급 시험문제, 6월 (전국통합)지방직 9급 시험문제보다도 난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3. ‘이론과 법령’분포(총20문항 중)는 ‘행정학이론 14문항’, ‘한국의 행정법령 6문항’입니다.
4. 단원별 출제분포는 ‘행정이론(기초이론 + 환류)( 4문항 20점), 정책론( 5문항 25점), 조직론( 3문항 15점), 인사행정론( 2문항 10점), 재무행정론( 3문항 15점), 지방행정론( 3문항 15점)’으로서 정책론 분야의 출제분포가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5.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내부수익률’ 계산문제가 출제되어 공식을 모르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04개)에 대하여 출제된 문제도 매우 상세하게 출제되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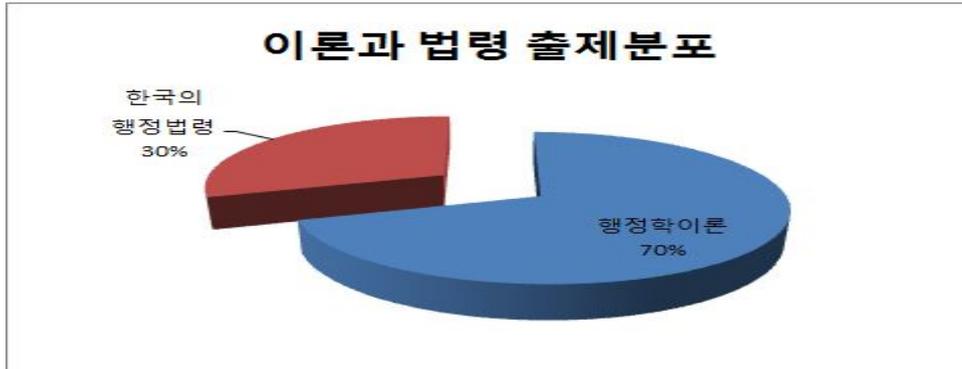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서울시 지방직 ‘행정학개론’ 점수는 다른 시험들의 ‘행정학개론’ 점수에 비하여 응시자들의 점수분포가 대체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 6. 28. 시행 (서울시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출제문제 분석 [ A 책형]**

**1. 이론과 행정법령(한국의 행정) 출제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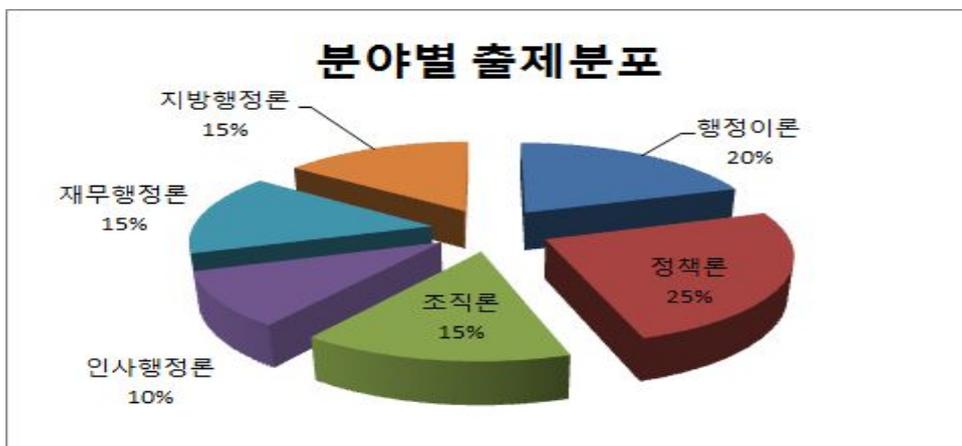
- (1) 행정학 이론 [ 14문항 70점]
- (2) 한국의 행정법령 [ 6문항 30점 - 5번, 11번, 14번, 15번, 16번, 20번]

**5번** 정부조직 관련 개별법들, **11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번** 국가재정법, **15번** 국가재정법, **16번** 지방자치법, **20번** 지방세기본법



**2. 분야별 출제 분포**

- (1) 행정이론(기초+환류) [ 4문항 20점] : 정부역할에 대한 입장, 롤스의 사회정의의 원리, 민간위탁방식, 최근 우리나라 정부 3.0 개혁의 내용
- (2) 정책론 [ 5문항 25점] : 내부수익률 계산,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사모형, 정책타당도, 성과지표
- (3) 조직론 [ 3문항 15점] :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 인간관과 동기부여이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사례
- (4) 인사행정론 [ 2문항 10점] : 개방형인사관리, 근무성적평정 오차
- (5) 재무행정론 [ 3문항 15점] : 예산안 첨부서류, 예산성과금,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 (6) 지방행정론 [ 3문항 15점]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자주재원



2014. 6. 28. 서울시 시행  
서울시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A책형)

문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 들여졌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5~36 88~89.

정답 ▶ ③

[해설]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시장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정하고 시장실패를 정부에 의해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를 불신하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체적 횡포자로 인식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전통적 정부관료제를 비판하고 소비자인 시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통적 대안(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을 제시한다.

문 2. 롤스(J. 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원초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68~169.

정답▶⑤

[해설] ‘사회정의의 기본원리’로서 2가지 원리

- ㉠ 정의의 제1원리(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 보장
- ㉡ 정의의 제2원리(차등조정의 원리)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만 분배 및 재분배

- ㉢ 차등의 원리 : ‘저축의 원리’란 사회협동의 산물 내에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비율(생산요소에 대한 투자비율, 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을 의미 → 정의에 맞는 ‘저축의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
-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하여 존재해야 한다.

㉤ 이상의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할 때 :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 →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 →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

문 3.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면허 방식                      ② 이용권(바우처) 방식                      ③ 보조금 방식
- ④ 책임경영 방식                      ⑤ 자조활동 방식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69~70.

정답▶④

[해설]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 - 생산주체와 생산수단 기준

주 체 수 단	공공부문	민간부문
권 력	일반행정 <정부의 기본업무> 법령상 규정업무	민간위탁 <안정적 서비스 공급>
시 장	<공적 책임이 강한 경우> 책임경영(책임운영기관)	<시장 탄력적 공급> 민영화

<민간위탁의 주요 방식(Savas, 1982)> - 서비스의 소비자, 생산자, 공급결정자의 세 가지 기준 : ㉠계약 방식 ㉡면허 방식 ㉢보조금 방식 ㉣구입증서(Vouchers) 방식 ㉤자원봉사자(Volunteers) 방식 ㉥자조활동(Self-help)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

문 4.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67%                      ② 50%                      ③ 40%                      ④ 25%                      ⑤ 20%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23.

정답 ▶ ②

[해설] 내부수익률이란 투자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로서 투자사업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예상총편익)와 투자사업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총비용)를 일치시켜 순현재가치(순편익)가 '0(zero)'이 되게 하는 어떤 할인율로 계산되며, R이 내부수익률이다.

(1) 총순편익(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의 총합-비용의 현재가치의 총합

$$(2) (B_0 - C_0) + \frac{(B_1 - C_1)}{(1+R)} + \frac{(B_2 - C_2)}{(1+R)^2} + \dots + \frac{(B_n - C_n)}{(1+R)^n} = 0 \text{ (순편익의 합)}$$

B<sub>0</sub>: 사업 최초연도의 편익, B<sub>1</sub>: 1년 후의 예상편익, B<sub>2</sub>: 2년 후의 예상편익.....  
C<sub>0</sub>: 사업 최초연도의 소요비용, C<sub>1</sub>: 1년 후의 소요비용, C<sub>2</sub>: 2년 후의 소요비용.....

위 공식에서 최초 연도(0차년도)에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최초 연도의 비용과 그 다음 해부터의 할인된 순편익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R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내부수익률(투입비용의 연평균 수익률)이다.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C_0 + \frac{(B_1 - C_1)}{(1+R)^1} + \frac{(B_2 - C_2)}{(1+R)^2} + \dots + \frac{(B_n - C_n)}{(1+R)^n} = 0$$

$$(4) C_0 = \frac{(B_1 - C_1)}{(1+R)^1} + \frac{(B_2 - C_2)}{(1+R)^2} + \dots + \frac{(B_n - C_n)}{(1+R)^n}$$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는 최초연도의 총비용(80억 원)과 1년 후의 예상총편익(120억 원)만 제시하였으므로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다.

$$80\text{억} = \frac{120\text{억}}{(1+R)^1} \rightarrow 80\text{억}(1+R)^1 = 120\text{억} \rightarrow 80\text{억} + 80\text{억} \cdot R = 120\text{억} \rightarrow 80\text{억} \cdot R = 40\text{억}$$

$$R = \frac{40\text{억}}{80\text{억}} \therefore R = 0.5 \text{ (50\%)}$$

문 5.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방송통신위원회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210, 543~544.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1회 주제 11,16번, 25, 40~41쪽

정답 ▶ ⑤ [해설] ①번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4.2.14.]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번 해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6.22.]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③ **번 해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5.28.]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④ **번 해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둔다.

⑤ **번 해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문 6.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② 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 ③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④ 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 ⑤ 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295~296.

정답 ▶ ①

[해설]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된다.

문 7.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 ⑤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59~360.

정답▶① [해설] 회사모형(firm model)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전략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다른 조직이나 환경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자기 조직에게 도전적인 다른 조직의 행위를 규제한다.

문 8.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 ③ 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 ④ 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 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92~400.

정답▶⑤ [해설] 크리밍(creaming) 효과, 호오손(Hawthorne)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크리밍(creaming) 효과> 크리밍(creaming effect)이라는 것은 원래 우유의 위에 떠있는 크림의 좋은 부분만을 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험과 조사에서 이와 같이 좋은 대상만을 취해서 실험이나 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준실험의 경우에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내적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즉, 외적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준실험의 경우, 이러한 외적 타당성상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림밍효과(creaming effect)이다. 이것은 실험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좋은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처리, 즉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처리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기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동일한 정책수단을 일반적 상황에 적용할 경우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상의 문제를 크리밍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선정선발요인, 표본의 편중요인**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외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오손(Hawthorne) 효과>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이다.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가된 정책효과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문 9.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 ① 10억 원의 예산                      ② 200명의 교육생                      ③ 연 300시간의 교육  
 ④ 50명의 취업                          ⑤ 3%의 국가경쟁력 제고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388~389.

정답 ▶ ④

[해설] 주어진 지문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판단을 하면 ①번은 투입, ②번과 ③번은 산출, ④번은 성과, ⑤번은 영향을 의미한다.

문 10.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511~514, 527.

정답 ▶ ④

[해설]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의하면, 만족요인을 충족(개선)시켜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의 사회적 인간관이다.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은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자기 통제 가능하며 외적인 유인과 통제는 오히려 동기부여를 방해한다. 복수 욕구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자기실현적·성장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장이론’ 또는 ‘신인간관계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577.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 \_ 2회 주제 21번, 51쪽

정답▶② [해설] 2014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04개)

- ① 준시장형 공기업-한국조폐공사, 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연구재단

★ 지면관계상.....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너무 많아.....인쇄하지 않고..... ppt 강의화면으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680, 683, 692.

정답▶③ [해설] 개방형 인사관리는 정부조직의 모든 계층에 외부(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엽관제(비서·비서관 등 별정직 공무원, 장관·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고위공무원단 등이 개방형 인사관리에 해당된다. 특히 엽관제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강화를 촉진한다.

문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게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 ⑤ 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752~754.

정답▶① [해설]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저지르는 착오 ⇒ 집단화의 오류 또는 선입견에 의한 착오(personal bias)

문 14.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835, 844.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한국의 행정법령 특강\_ 4회 주제 47번, 115, 125쪽

정답 ▶ ⑤ [해설] 국가재정법[시행 2014.4.2.] [2014.1.1., 일부개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시행일 : 2014.4.2]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생략.....)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955~956.

정답▶① [해설]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예산제도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방식으로서 재정당국이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와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한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중앙관서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여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하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지출한도 설정한다.

문 1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정부 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 ⑤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98~200.

★2014년 4월 3일 Point 행정학개론 국가직 대비 총정리 특강\_주제 72번, 22쪽

★ 2014년 2월 7일(금) Point 행정학개론 아침무료특강\_ 주제 3번, 3쪽

정답▶②

[해설] 스마트 정부(정부 3.0)과 빅데이터(Big Data)

- ①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 ② 빅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O'Reilly Radar Team, 2012).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 ③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McKinsey, 2011).
- ④ 공공 기관의 입장에서도 빅데이터의 등장은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만든다.
- ⑤ 2012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사회 기술 모델(Social and Technological Models)'을 제시하고 '빅데이터'가 사회현안 해결에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 ⑥ '빅데이터'는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혁신을 수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3.0의 전략방향

-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이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를 추진한다.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이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문 1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552.

★ 2014년 4월~5월 Point 행정학개론 통합 지방직·서울시 지방직 대비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풀반 \_ 5월 17일(토) 4강, 제15회 실전모의고사 문제 20번

정답 ▶ ⑤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재와 남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렵다는 책임행정의 결여문제가 있다.
-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은 경우 이용자인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다.

문 20.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 난이도: 상·중·하)

- ① 주민세      ② 담배소비세      ③ 상속세      ④ 취득세      ⑤ 자동차세

★ 2014년 시험대비 9급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068.

★2014년 4월 3일 Point 행정학 국가직 대비 총정리 특강\_ 주제 97번, 31~32쪽

★ 2014년 5월 Point 행정학 지방행정론 특강 \_ 2014년 대비 Point 행정학개론 교재 p. 1068.

정답 ▶ ③

[해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14.1.14.]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 6. 개별소비세 7. 교통·에너지·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 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지방세기본법>[시행 2014.1.1.] [2014.1.1., 일부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서울시 지방직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